

Vol. 18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3. 5. 8.

■ 정책동향

- 윤석열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주요 성과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 행정조사 정비방안 마련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 노력 지속
-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 경감
-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 총력
-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 농식품부-CJ 한식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새롭게 마련·시행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OECD 국가의 농식품 분야 인력 및 숙련 부족과 대응
- 이슈 브리프 2 | 조선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식량 문제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2년 미국농업리뷰 - 시장과 무역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폐지(중간보고)
- 언론 동향 | 바이오경제 관련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3.5.3.)

☐ 개요

- [정부, 윤석열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및 30대 핵심성과집 제작·배포, 2023.4.26.] 윤석열정부 출범 1년(2023.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30대 핵심성과집을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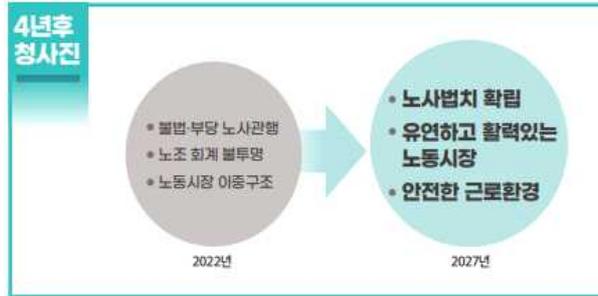
〈분야별 30대 핵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개혁)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 정부혁신◆ (II. 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 (III. 사회)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등◆ (IV. 미래)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등◆ (V. 외교·안보)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보훈 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등	<p>개혁</p> <p>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p> <p>경제</p> <p>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 <p>사회</p> <p>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p> <p>미래</p> <p>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p> <p>외교 안보</p> <p>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p>

㉔ 정책동향

□ 주요 핵심성과

1.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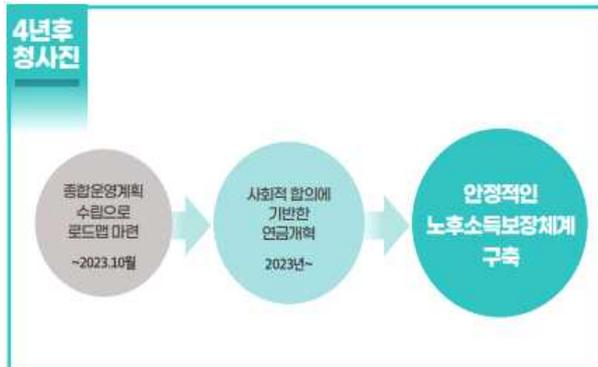
- ◆ (1. 노동개혁) △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 (2. 교육개혁) △유·초등…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초·중등…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지역중심 대학개혁



- ◆ (3. 연금개혁)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 ◆ (4. 정부혁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2. 경제

- ◆ (5.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건전재정 기초 확립 및 세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 ◆ (6.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 ◆ (7. 부동산 시장 정상화)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 ◆ (8. 규제개혁)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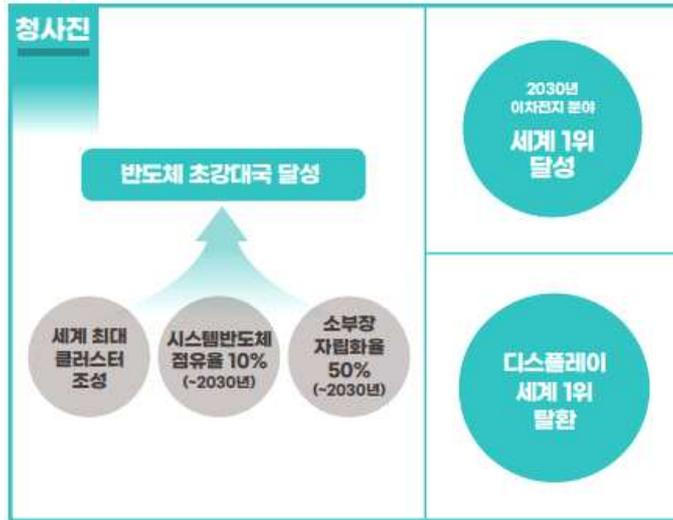


㉔ 정책동향

- ◆ (9.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유망 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 ◆ (10.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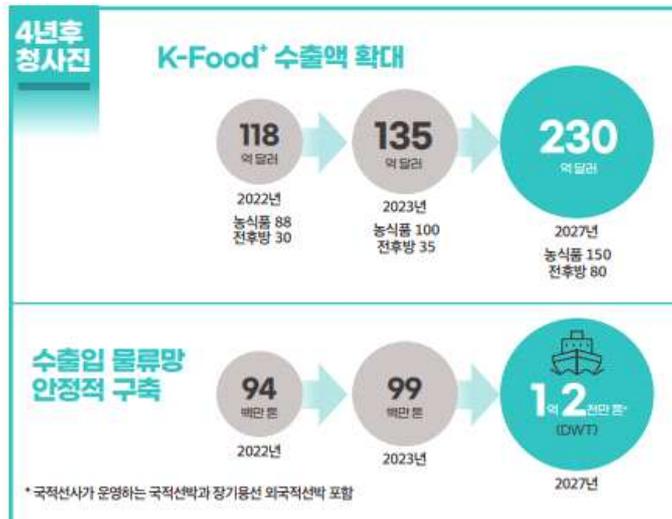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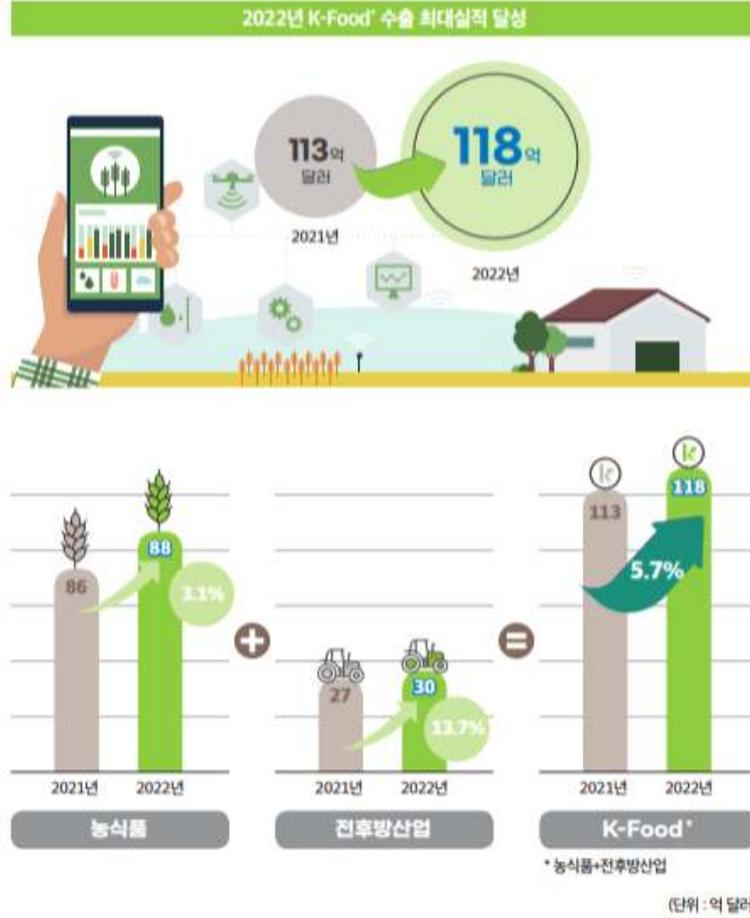
- ◆ (11.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 정책동향

◆ (12.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㉔ 정책동향

3. 사회

- ◆ **(13.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역대 최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 ◆ **(14. 약자복지 강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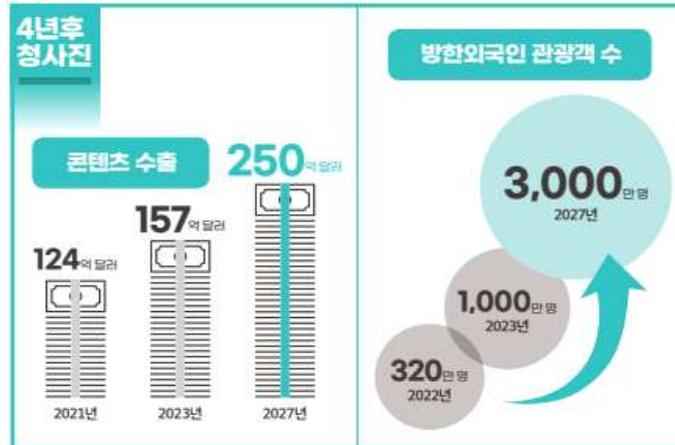
- ◆ **(15.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촘촘한 지원체제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 ◆ **(16. 사회서비스 혁신)**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17. 필수의료 기반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 **(18.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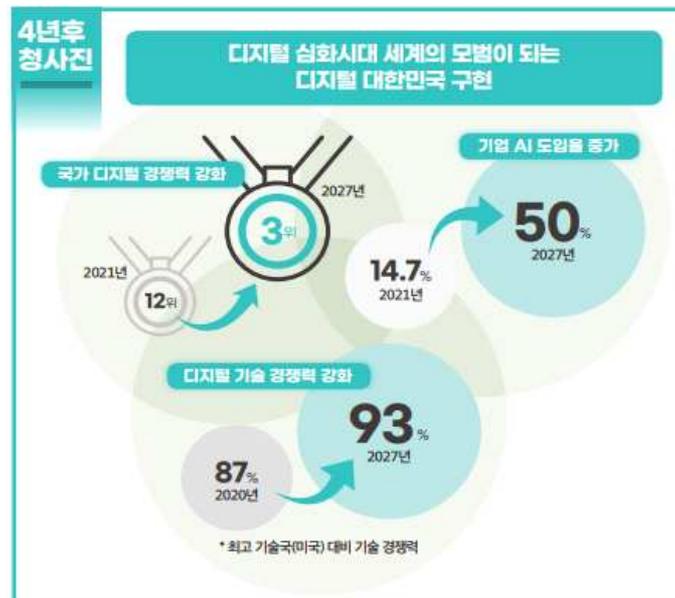
㉔ 정책동향

- ◆ (19.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4. 미래

- ◆ (20.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 (21.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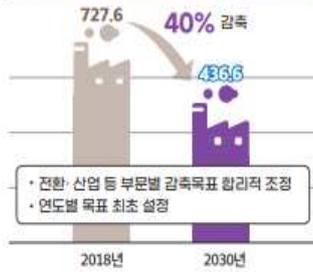


- ◆ (22.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 ◆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㉔ 정책동향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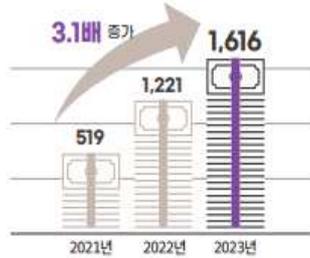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단위: 백만 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단위: 억 원)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단위: 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단위: 개)

4년후
청사진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진국 대비 60~80% 수준)

수송부문 탄소중립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㉔ 정책동향

- ◆ (24.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 ◆ (25.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㉔ 정책동향



5. 외교 · 안보

- ◆ **(26.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 **(27.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 ◆ **(28.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적극적인 인도적지원으로 국제 위기 대응에 기여



- ◆ **(29.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장병 사기·복지 증진
- ◆ **(30.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이상 인상

㉔ 정책동향

◆ 총괄 동향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5.3.)

□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보고, 202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

※ 2022년 대통령 뉴욕구상과 2023년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美 국빈 방문(2023.4.24.~30. 시 하버드대 연설(4.28.))의 후속 조치의 일환

┃ 디지털 질서 관련 대통령 연설 주요 메시지 ┃

뉴욕구상 (2022.9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다보스포럼 (2023.1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디지털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버드대 (2023.4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추진 배경)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질서)가 부재(不在)한 상황

┃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

기술 진보	시도(도전)	혁신	디지털 심화 쟁점
생성 가능한 AI (챗GPT 등)	창작활동 적용	AI 소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영상·음성 인식 AI 추론·판단	면접 활용	AI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기반 자율학습 및 로봇틱스	의료현장 도입	수술용 AI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증강현실	소셜활동	메타버스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공간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AI 영상인식 센서기술 고도화	운송수단 활용	자율주행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Lv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및 사회적 논의·공론화 본격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 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정기 진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UN, OECD 등) 주도 및 디지털 질서의 공유·확산

□ 주요 내용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2023.9월)할 계획
 -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大 연설의 기초하에, ①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②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③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④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
-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
-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2023.8월)할 계획
-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年 1회)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
 - ※ ① 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 ② 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③ 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④ 개선 필요 사항(입법, 규제 등) 도출·제언 등
-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
 -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가칭)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2023년 內)하여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

행정조사 정비방안 마련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3.5.3.)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사 정비방안 마련, 2023.5.3.] 국무조정실은 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4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확정

※ 각 부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주요 내용)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포함 행정조사 정비과제 77건* 마련, △행정조사 통합 연번 부여 등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 ①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통합·축소: 26건 / ②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대상자 편의 제고: 29건 / ③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 16건 / ④ 행정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 정비: 6건

Ⅰ 행정조사 정비과제 세부 내용(농식품부) Ⅰ

연번	행정조사명 (농식품부)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②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대상자 편의 제고>			
37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점검	기존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약관리법 개정 완료(2023.1월)
38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기존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2023.12월)
39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기존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2023.12월)
40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기존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2023.12월)
41	식물검역대상 물품 저장소 검역	기존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고시) 개정(2023.6월)
<③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			
69	종자산업 실태조사	기존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는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수행, 현장 면담조사 등 일부 조사업무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임규정 미비 개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 마련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2023.12월)

I 불합리한 행정조사가 77건 정비·개선 I



불합리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기업의 부담과 불편 존재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개선으로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① 필요성·실효성 없는 행정조사, 폐지·통합·축소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현행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와 해양경찰청 본부의 서면심사를 이중으로 실시

개선 본부의 서면심사를 폐지하여 중복조사 방지



•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

② 조사방식 개선 (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등)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

개선 연 1회로 완화



•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

③ 행정조사 실시 근거·방법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재, 위반자 처벌규정만 존재

개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토지 및 건축을 등 출입·조사 등)



• 23년 12월 개정 예정

④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

☑ 원가·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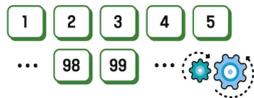
현행 검사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선 행정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 23년 개정 예정

I 행정조사가 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 I



☑ **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



☑ **행정조사의 유형 분류 (조사목적·필요성, 행정규제 유無 등) 및 유형별 정비방안 마련**



☑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 및 안내서 제작·배포**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2023.5.2.)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우수 과제 선정, 2023.5.2.]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

㉔ 정책동향

※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이를 집중 뒷받침하고자 2023년 처음 추진

- (주요 내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으며,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 원씩 총 8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

▣ 과제기획 예시: 기술·프로그램·용자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공간 조성(기금) ▣

지자체 전략	중소벤처기업부(SW)		행정안전부(HW/SW)
① 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유치·지원	• 기술지도, 인증 및 특허 지원	• 장기·저리 용자 지원	• 첨단 생명공학(바이오)기업 입주 공간 조성
②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자 인력개발 교육	• 청년전용창업 용자 • 창업기업 사업화	• 청년창업 센터 건립 • 통근여건 개선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 ▣

연번	지자체(협업)	선정과제명
1	부산 서구	• 의료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 연계
2	강원 강릉시	• IT 기업 연계 노후 관광지 개선 (IT업체 기술개발향상), IT 기업 협의회 구축 및 미디어아트관 조성
3	강원 홍천군	•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4	강원 평창군	• 그린바이오 기업 근로자의 정주·생활 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5	충북 괴산군(충청북도)	•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
6	충북 단양군(충청북도)	• 청년희망센터(단청마루) 건립 연계 청년창업지원
7	충남 보령시	• 보령 수산자원을 활용한 『청년희망타운』 조성
8	충남 부여군(충청남도)	•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농업기업 육성 지원
9	전북 임실군·순창군	• [임실] 귀농귀촌 창업 보육 센터 건립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순창] 농생명바이오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프로그램 구축
10	전남 곡성군	• 러스틱타운, 돌아오지촌 입주기업 지원
11	전남 해남군	• 해남 김·고구마 대박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12	전남 함평군	• 해보면 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13	경남 의령군	• 의(령)로(컬푸드)운 패키지 육성사업 (스마트팜 육성)

㉔ 정책동향

◆ 농업·농촌 동향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4.)

□ 개요

- [농식품부,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2023.5.4.] 2023년 5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이하 제4차 종합계획)을 발표,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
 - ※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 (주요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5년간 ① 전략 품목의 안정적 확보, ②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지원, ③ 국내 반입 활성화, ④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주요 내용

1.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
 - ※ 전략 품목: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과 식품업계 필수원료인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카사바 진출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여 2027년에는 600만 톤을 확보할 계획,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 톤에서 3배 증가한 목표
-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 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
 -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오세아니아로 추가 거점지역을 발굴

㉔ 정책동향

2.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지원

-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여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
 - 한편,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
 -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 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
-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
 - 해외 농산물의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에는 국내 식품·사료업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내 반입 활성화

-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
 -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내 수요 업체와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비상 시 대비와 함께 평상시 거래도 확대되도록 지원
 - 농산물 국내 반입 시 필요한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지원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한 국내 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

4.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식품, 가공 분야로의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㉔ 정책동향

-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ODA)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연계하여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와 협조하여 현지 **농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영농기술을 해외농업 기업에게 전수**
-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
 - **해외농업**과 **관련한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과 현지 법률·제도, 정책, 시장현황, 성공사례·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
- **[향후 계획]**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 이와 함께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 참고: 1~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개요 ▣

계획명	주요 내용	목표 및 달성도
제1차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2009~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된 최초의 중장기 계획(10년 단위) -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확립, 전략적 해외농업개발 추진, 해외농업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2018년까지 곡물 소비량의 10% 확보 • (달성도) 2018년 곡물 소비량의 3% 확보 (미달성)
제2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2012~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10년 단위) -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해외확보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해외농업개발 지원체계 내실화,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2021년까지 곡물소비량의 35%인 7백만 톤 확보 • (달성도) 2021년 곡물소비량의 10%인 215만 톤 확보 (미달성)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정(2012)에 따라 1차 계획 기간 종료 이전에 종합계획을 수립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제2차 법률 개정으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 해외농업 진출 분야 확대 및 산업간 연계 강화,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및 정착지원, 북방·동남아 지역을 해외 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및 정책 내실화, 진출국과 농업협력 및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2022년까지 해외농업자원 76만 톤 확보 • (달성도) 2021년 해외농업자원 215만 톤 (2022년 219만 톤 확보) (달성)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2017)에 따라 2차 계획 기간 종료 이전에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 노력 지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1.)

- [농식품부,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 노력 지속, 2023.5.1.]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 (2020년 2월),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
 - ※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
 - ※※ 밀 재배면적: (2020) 5,224ha → (2021) 6,224 → (2022) 8,259 → (2023p) 12,000
밀 생산량: (2020) 16,985톤 → (2021) 26,324 → (2022p) 33,000 → (2023p) 50,000
밀 자급률: (2020) 0.8% → (2021) 1.1 → (2022p) 1.4 → (2023p) 2.2
-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
 - ※ 전문생산단지 조성: (2020) 27개소 → (2021) 39 → (2022) 51 → (2023) 73
 -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 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 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
 - ※ 정부비축물량: (2021) 8,401톤 → (2023) 20,000 → (2025) 30,000 → (2027) 50,000
 - 밀과 콩·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 또한, 국산 밀 품질 및 가공적성 제고를 위해 전용 장비 및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식품 및 제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안)에 대해 실증단계를 거쳐 2023년 말까지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체계를 마련할 계획
 - ※ 장비/건조·저장시설 지원(누계): (2021) 2개소/2개소 → (2022) 16/4 → (2023) 27/7
 - 국산 밀 밀가루 용도별(강력·중력·박력) 품질 표준화 블렌딩 조건 설정 연구(농촌진흥청) 등을 추진하여 국산 밀 가공 이용성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
-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밀 생산농가와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산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가공·제분 비용**을 신규 지원

㉔ 정책동향

※ 계약재배물량: (2021) 4천 톤 → (2022) 6 → (2023) 8

※※ 밀 가공확대지원: (2022) 16억 원, 4천 톤 → (2023) 20억 원, 5천 톤

- 또한, 관련 기업·단체와 연계한 **국산 밀 마케팅·판촉 행사 지원**, **학교급식 확대**, **지자체(로컬푸드(LOCAL FOOD))와 연계한 지역단위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의 **환경적 가치(저탄소 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국산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 경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4.)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5.4.]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 ※ ‘경영회생지원사업’: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
- (주요 내용)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고,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023년 3/4분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 총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3.)

-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예방 총력, 2023.5.3.] 농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월~10월)
- (주요 내용) △5월부터 장마 전까지 수리, 원예, 축산·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 참여, △6월 이후는 **24시간 상황관리**, 피해 시 **신속복구** 등 본격 대응 태세

㉔ 정책동향

㉑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5.2.~6.30.)

- **(수리시설)** D등급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23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3,787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수방자재·양수기 확보, 감시인력 배치, 단전 대응계획(비상발전기, 이중선로 확보 여부) 등 점검·보완
- **(원예시설)** 최근 3년간 피해를 본 시설 3,650개소(과수원 794, 시설하우스 2,856)와 지자체가 선정한 취약시설 3,250개소(과원 1,300, 시설하우스 1,950)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 점검·보완
- **(축산시설)** 재해 취약시설 1,032개소(한우 717, 가금 180, 양봉 58, 돼지 57, 기타 20)를 대상으로 축대보수 여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여부, 송풍팬·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정기 소독 여부 등 점검·보완
- **(매몰지)** 과수화상병 매몰지 1,502개소, 가축매몰지 66개소(AI 33개소, ASF 25, 구제역 1, 기타 7) 등에 대하여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매몰지 주변 물 고임, 시설물 고정, 배수로 정비상태 등 점검·보완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27,400개소) 중 2023년 1~4월까지 점검을 완료한 19,363개소 외 잔여 취약지역 8,037개소를 대상으로 낙석·붕괴·침식 여부, 사방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보완
- **(태양광)**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1,628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여부와 침식·붕괴·토사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하여 점검·보완

㉒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월~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 상황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 재해대책 상황실: 재해 총괄(농정국), 소관 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 대응)** ① 관계부처·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응급 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 등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
- **(농가 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피해 우려 지역 농가 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3.)

- [농식품부,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023.5.3.] 농식품부는 2023년 5월 3일,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2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
 - ※ 참석: (농업인단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민의길, 축산·과수·수출 관련 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또는 전무 등 /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정책보좌관, 농업통상 과장, 자유무역협정팀장, 담당관 등
- (주요 내용) 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 동향, ②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
 -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전통적인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개방과 달리 식량 안보·공급망·환경 등 관련 새로운 통상규율 마련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14개국 참여
 - ※※ (IPEF) 그간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의 경과와 동향,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주요 FTA 추진현황)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한-칠레 FTA 개선 협상 등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
 - ※※※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 사용

농식품부-CJ 한식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3.)

- [농식품부, 농식품부-CJ 한식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23.5.3.] 농식품부는 2023년 5월 2일, 씨제이(CJ)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하여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농식품부·씨제이(CJ) 업무협약을 체결
 - ※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인재 양성, 한식 식문화 전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 (주요 내용) △2023년 5월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 △한식 영셰프(Young Chef) 간담회...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

◆ 축산 동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새롭게 마련·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5.3.)

- [농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새롭게 마련·시행, 2023.5.3.]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

- ※ ‘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 (주요 내용)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앞장설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예)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

- ※※ 단, 소·돼지·닭 사육 농가이면서 안전관리인증(HACCP) 충족 필수

㉔ 아젠다 발굴

아젠다발굴

OECD 국가의 농식품 분야 인력 및 숙련 부족과 대응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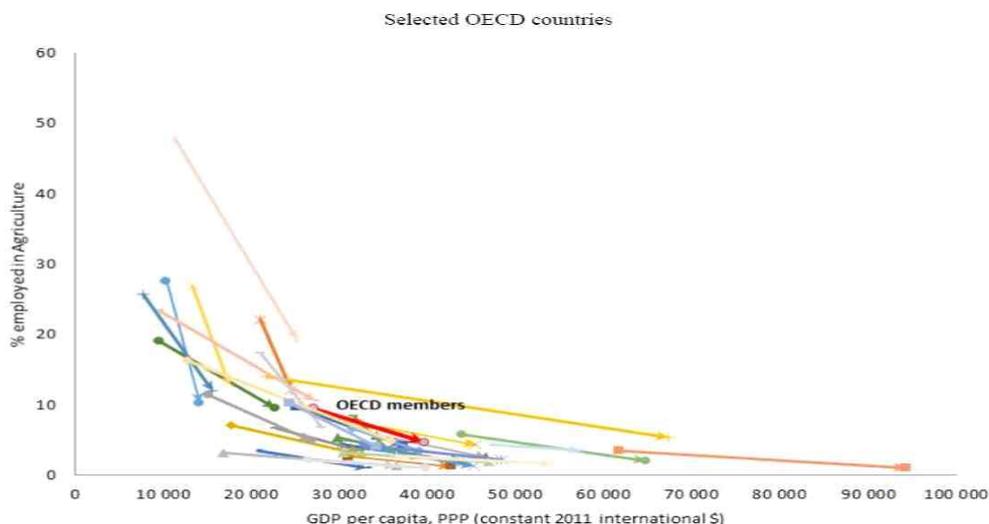
이슈 브리프 1 OECD 국가의 농식품 분야 인력 및 숙련 부족과 대응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국가의 농식품분야 인력 및 숙련 부족과 대응” (2023.4.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 인력 수급 현황과 특징>

-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의 **본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농업 인력** 등 **생산요소**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농식품 분야의 인력 수급은 ① **농업구조 변화**, ② **기술발전**, ③ **소비자 요구 변화*** 등 3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
 - ※ ▲농장 규모, 농업 인구구조 등 농업구조 변화, ▲자동화, 로봇 공학, 드론 기술증가 등 기술발전, ▲동물 복지, 환경 발자국 및 식품 품질(안전성) 등 소비자 요구 변화
- 농식품 부문의 고용은 OECD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 지속
 - 농업 구조 변화, 기계화 진전, 농업 GDP 비중 감소 등에 따라 OECD 국가에서 농업 고용은 전체에서 **10% 미만 수준**으로 감소*
 - ※ 지난 10년 동안 EU에서 약 250만 명의 근로자가 농업 부문을 떠났으며, 농업 인력이 2030년 까지 매년 약 2%씩 계속해서 감소 전망, 반면 식품 부문은 일자리 점유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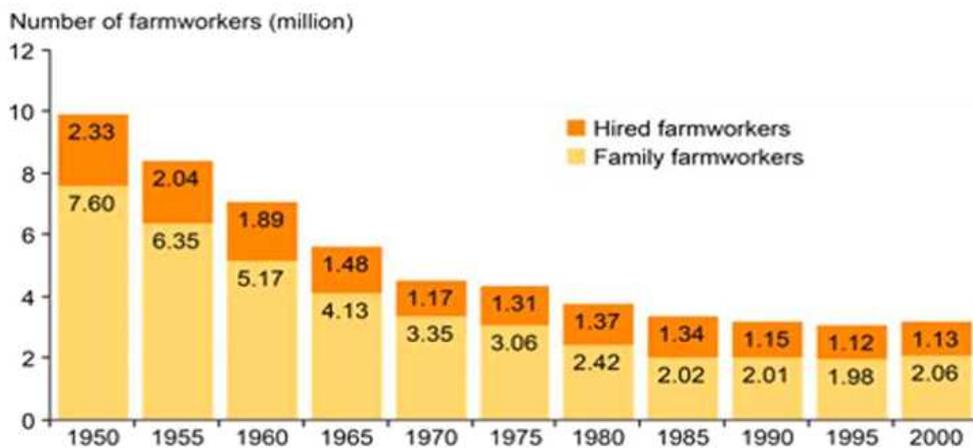
■ 1991년~2017년 농업 고용 및 1인당 GDP 추이 ■



㉔ 아젠다 발굴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높은 진입장벽**(매력도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저하 등)으로 **신규 진입자 수가 적은 경향**
 - **농업노동**은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성격을 띠며, 이는 농업 근로의 **안정성 저하**와 밀접히 **관련**
 - **가족 노동**이 감소하며, 이를 **고용 노동**(임시, 계절, 시간제 등)이 **대체**하는 추세, **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숙련도가 낮은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 ※ 미국 노동통계국(2020)은 2029년까지 농장주 및 관리자가 6% 감소하고 농업 노동자가 1% 감소할 것으로 예측

■ 1950년~2000년 미국 농장 노동력의 변화 ■



- 반면, 최근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신기술 활용** 및 **마케팅·경영 능력** 등을 갖춘 **고숙련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 관련 교육**과 **훈련프로그램**과 **인프라 마련**이 **긴요**한 상황
- 이에, 농식품 분야는 **종사 인력**의 **숙련도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

㉔ 아젠다 발굴

<주요 OECD 국가들의 대응 방안>

■ 일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신규 진입자 수 감소는 수십 년 동안 일본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 연령은 2010년 66세에서 2020년 68세로 증가 - 농업인 수는 1960년 1,180만 명에서 2020년 약 140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 - 기존 농작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리적 위험을 수반하며, 종종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 - 농업노동 부족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통한 계절 노동력에 크게 의존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농업인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농업인에게 농업 진입 후 최대 7년 동안 소득지원 자금제공 - 선진 농법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을 결합한 학습 및 훈련 기회 확대 ■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지원 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모두 결합하는 수요 중심의 자문시스템으로 진화 •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민간 네트워크와 농과대학의 다양한 단기 연계 과정 마련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재편 • 숙련 노동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지원(원격 및 현장 학습 선택, 학습 코스 다양화 등) 실시 </div> ■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도의 농작업 관리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림수산성은 “스마트 농업을 로봇 공학, 인공지능(AI), 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2019년부터 ‘스마트농업 실증사업’을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트랙터, 살충제 살포 드론, 물 관리 시스템 등 농장 자동화 및 정밀화에 의한 노동 의존도 감소 •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확한 성장 예측과 비료 및 화학 물질의 효율적인 사용 등 고도의 농작업 관리 실현 • ICT를 활용하여 축적된 농업 노하우의 이전 활성화 </div> - 높은 초기 비용, 부족한 인프라, 농업인 인식 및 교육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병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R&D 투자 강화, 현지 전담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실시, 정밀농업을 위한 IT 플랫폼 개발 보급 등 </div>

㉔ 아젠다 발굴

■ 뉴질랜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인구 감소 등에 의한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경폐쇄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하여 이 시기 동안 상당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 ■ 이에 뉴질랜드는 농식품 부문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함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하는 농업 기술에 대한 미래 수요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농업 인력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적용 범위 향상, 인력 계획에 대한 관심 제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력 강화, 실용적인 계획수립 등 여러 요소가 관여 ■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진입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충분한 기술과 지식 제공을 보장하는 교육 및 훈련을 강화 -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좋은 고용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농식품 및 섬유(양모 등)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 및 정부 공동 협력 협의체로 2014년에 ‘1차산업 역량 연합(Primary Industry Capability Alliance)’을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농식품 및 섬유 숙련 실행계획 2019-2022*’를 수립 시행 중 ※ 중점 추진과제: ▲(수요 예측과 계획) 노동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생성 및 활용, ▲(매력 향상) 재능있고 혁신적인 인력 유치를 위한 인식 변화 교육·홍보와 좋은 작업환경 조성, ▲(교육 강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맞춤형 교육 추진 - 2019년부터 ‘1차산업 기술 리더 작업반’을 운영하여 농식품 분야 일자리의 매력과 농업노동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산 ■ ‘1차산업 자문 서비스(PIAS, Primary Industry Advisory Services)*’를 통해 생산 환경 개선, 경영체 단위 경영 및 인력 수급 계획수립 지원, 지역단위 문화 역량 제고 워크숍 및 세미나 추진,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750명의 컨설턴트, 약 500명의 농장 생산 환경 개선 전문가 ■ 1차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440억 NZD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FIT for a Better World’이라는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 청년세대의 농식품 분야에 취업을 확대하는 인센티브와 자문 서비스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간의 연결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

㉔ 아젠다 발굴

■ 네덜란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노동자*는 네덜란드 농식품 분야 (임시)노동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EU 국가에서 온 532,000명 이상의 노동 이민자가 네덜란드의 모든 산업부문에 고용된 것으로 추정 ※ 식품 가공 및 다운스트림 활동에 고용된 사람들 외에도 이주 노동자의 약 19%가 원예 분야에 고용 - 임시 및 계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장기적 의존은 농식품 공급망에 불확실성 및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첨단 및 자본 집약형 농업을 지향하는 네덜란드 농식품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숙련된 노동자를 유치하는 것은 농업 인력 정책의 중요 과제로 부각
----	---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및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이주 노동자 보호 TF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통합 노력 지속* 작업 대행사 및 계약자에 대한 모니터링, 거주지 개선, 안전 및 작업 조건 개선 등 ■ 네덜란드의 농업, 자연 및 식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녹색 교육(Green Education) 2016-2025’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높이고, 자격을 갖춘 인재 유치와 농식품 분야 홍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 2014년부터 농업 교육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탁자(Green Table)’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농업 교육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농식품 노동시장에서 변화하는 숙련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들의 변화를 촉구
-------	--

■ 스페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여성농업인은 농식품 분야의 중요 기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여성은 “농업 및 사냥 관련 활동”에서 고용의 26% 수준을 차지하며, 식품산업에서는 고용의 약 41%를 차지 - 농장주 중 약 32%가 여성이지만 소유주인 경우 이 수치는 약 26%로 감소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직의 7%만이 여성 - 여성 소유 농장 규모는 남성 소유 농장보다 평균적으로 작은 경향 - 여성 소유 농장의 연평균 생산량은 스페인 전체보다 40% 적은 경향
----	--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정부는 농업 분야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 공동 소유제’를 시행(2019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 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소유할 경우 조세 특례 지원, 일부 공적 자금을 대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부부간 공식적으로 농업 파트너십을 맺고, 여성이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농장 소유 및 관리 모델 전파 </div> - 여성의 농업협동조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의 성별 동등성 지향,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계획 등을 실시 - 여성농업인 우수 활동 사례집 제작 보급, 훈련프로그램 도입 시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 운용,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 특별 기금 마련 등 실시
-------	--

㉔ **아젠다 발굴**

■ 미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미국 농업 노동력은 ① 지역 농장주와 그 가족, ② 고용 노동자라는 두 그룹의 혼합으로 구성되며,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해 이민자 및 임시 노동자에 크게 의존* - 미국 농업 고용은 연간 약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수준* ※ 2020년 농업, 식품 및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1,970만 개(절반 이상이 음식 서비스업)이며, 전체의 10.3% 수준 - 서류 미비(불법) 이민자들은 수십 년 동안 농업 노동력의 중추* ※ 고용된 농장 근로자의 68% 외국 국적이고, 36%가 합법적인 노동 허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임시 및 계절 이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비자 시스템 운영 - 서류 및 심사 간소화 등 낮은 진입장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도 요구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쉽게 진입 가능 ■ 임시 및 계절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농업 교육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시행 -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 및 참여 촉진, 이민자에 대한 이해 확대, 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급 숙련도 향상 기회 마련 등 ■ 생산자들은 기술 플랫폼, 컨베이어 및 기계 수확기 활용 등 새로운 노동 절약 기술 채택, 비노동 집약적 작물 전환, 일부 농업생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방안 선택

<주요 정책 권고 및 우리나라의 대응>

■ OECD의 권고

- **좋은 경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서 **농업의 이미지 개선**할 필요
 - **식량안보, 환경, 생물 다양성** 등 **농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단순 기능·기술부터 전문 영역까지 **숙련도**를 가진 다양한 **농식품 인력 육성**
 -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여 최근 농식품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현장과 연계**를 강화
- **농업 자문(컨설팅)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

㉔ **아젠다 발굴**

▮ **우리의 대응**

○ **일시 및 계절적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공동으로 매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을 수립·시행, 지역 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농촌인력증개센터(170개소), 도농인력증개플랫폼 서비스,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19개소)** 등을 추진 중

○ **귀농 귀촌 활성화, 후계·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등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신규 유입자 제고

※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제1차(2023~2027) 후계·청년농 육성기본계획,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등 마련·시행 중

- 관련 법률 재개정, 정주·정착 인프라 개선, 농지·자금지원 강화, 주거·보육서비스 확충, 우수 성공사례 확산 등 추진

○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이미지 개선, 노동 절감, 고급인력 육성** 도모

-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조성을 통해 **청년농교육, 창업임대, 기업실증지원** 등을 지원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곳

-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천 명 육성,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을 하기 위해 **R&D, 교육 컨설팅 투자 확대**

- 기존 온실 중심에서 **축산, 노지** 분야로 확대하여 **첨단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토록 하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모여있는 **첨단 ‘농산업 단지(Complex)’** 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고급 인재 유치** 도모

○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사업 개선**

- (**교육 훈련**)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관심을 높이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컨설팅 사업**) **자문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현장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

㉔ **아젠다 발굴**

이슈 브리프 2 **조선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식량 문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조선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식량 문제” (이슈와 논점, 제2086호, 2023.4.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북한은 2023년 2월 26일,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실현**’ 달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
 - 이번 북한의 제7차 전원회의도 2023년 6월 밀과 보리 수확을 앞두고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해 조기 개최
- 농촌진흥청은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추정치)이 **451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톤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 필요국**’ 으로 **재지정**
- 북한의 식량 문제는 역설적으로 핵 문제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긴장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사안인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전원회의 개최 배경〉

- 북한의 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북한 당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로서 지난 2021년 1월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2년 12월 까지 총 6번의 전원회의를 개최
-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경제계획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경제 분야의 성과와 과업에 대한 논의를 모두 생략하고, 대신 국방력 강화방안과 대미/대남 관련 이슈를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경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에 따라 약 두 달 만에 **제7차 전원회의**를 소집
 - 제7차 전원회의 첫날(2.26일) 의제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인 2022년도 사업정형을 분석총화**” 하고, 이를 토대로 “**가을밀과 보리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 며 “**정보당 수확고**” 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독려했으며, 모범 사례(염주군, 증산군, 봉산군 등)까지 제시하면서 “**과학농사**” 의 **중요성**을 강조

㉔ **아젠다 발굴**

- 김 총비서는 확대회의 이틀째(2.27일)에도 “올해 **알곡 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 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업생산력 증대**를 이번 전원회의 개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밝힘.
- 이미 북한은 **2021년 12월**,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의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인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 을 채택한 바 있으며, 1964년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 이후 두 번째로 김정은식 ‘**농촌테제**’ 라 할 수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 요약,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향후 10년간 알곡 생산목표와 축산물·과일·채소** 등의 **생산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예고
- 특히 김 총비서가 ‘**농촌혁명강령실현**’ 을 위해 강조한 것은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식량 생산 구조의 변화 필요성**
 - 이에 북한 당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옥수수 대신 **밀과 보리**로 **식량 생산 작물**을 급히 **교체**하기 시작하여 **2022년**은 새로운 **농촌강령**을 적용한 **첫해**, 그러나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김 총비서의 지시가 시행 **첫해**부터 **제동**
 - 김 총비서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 은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 와 **농촌과 도시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비롯
- 결국 김 총비서가 제7차 전원회의 조기 개최를 통해 **알곡 생산 증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올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식량 생산 증대**가 **북한의 자립 경제 노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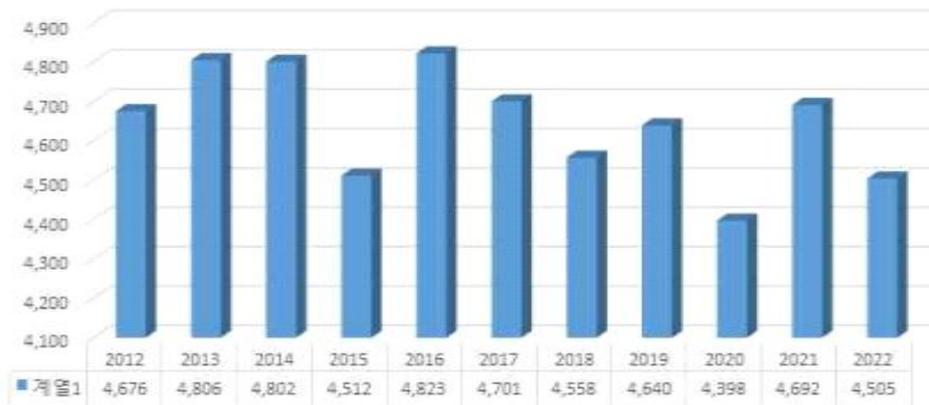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 농촌진흥청은 2022년 12월 **2023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치**를 **451만 톤**으로 발표하고, **2021년 대비 약 18만 톤(3.1%)**이 **감소**한 규모라고 밝히면서 이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해 **파종기**의 **가뭄**과 **성숙기**의 **집중호우**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의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

㉔ **아젠다 발굴**

- FAO는 2022년 12월 발간한 ‘작황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 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 필요국’ (Countrie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for Food)으로 재지정
 - ※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Report’
- 2022년 기준 북한의 최소 식량 소요량은 595만 톤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68만 톤(2012~2018년)에서 455만 톤(2019~2022년)으로 더 감소
- FAO는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외부 식량 지원 필요량을 110만 톤으로 추정

▣ 북한 식량 생산량 (천 톤) ▣



-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의 경우 3.8%, 옥수수는 1.3%, 서류(감자, 고구마와 같은 뿌리 작물)는 15.0%가 전년 대비 감소
- 주요 식량 이외에도 두류의 경우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잡곡류도 21.7% 감소한 반면, 맥류는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 조치에 따라 재배면적이 30% 증가 하면서 12.5% 증가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원인 및 대처 방안>

- 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농사의 당면과업과 목표를 식량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었고, 이것은 2022년 ‘농촌혁명강령실현’의 첫해의 식량 생산량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 조치
- 김 총비서는 2022년 식량 생산 부진의 원인을 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업발전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내적 요인들을 제때 찾아내어 해소” 할 것을 강조하고, 전원회의에서 당내 간부들이 “시정, 극복해야 할 편향 및 교훈” 등을 지적

㉔ **아젠다 발굴**

-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김 총비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다가오는 6월 수확을 앞둔 밀과 보리농사로 『로동신문』은 전원회의 시작부터 “**가을밀, 보리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 는 김 총비서의 지시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
- 김 총비서가 **밀과 보리농사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것은 단순히 **생산량의 증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농촌혁명강령실현**’ 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 앞서 김 총비서는 2022년부터 농촌 발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식량 생산 작물을 옥수수에서 수요가 급증한 밀과 보리로 전환한 바 있으며, 만약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식량 생산량이 목표량에 미달**하게 된다면 10년을 목표로 설정한 ‘**농촌혁명강령실현**’ 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
- 김 총비서는 2023년 3월 1일 제7차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2023년 농업 생산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제안
 - 첫째,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올해 계획된 **관개 공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시, 2022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이 파종기의 가뭄과 성장기의 홍수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인식한 결과
 - 둘째, 농업생산의 “**현대성과 선진성**” 을 위해 **농기계 부문**을 **혁신적으로 개선** 하라고 지시, 북한은 이미 지난 **7차 당대회**에서 **농업 기계화 비중의 목표**를 **60~70%**로 **제시**하였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셋째, **간척지 개간**을 통한 **경작 면적**을 **늘릴 것**을 강조, 김 총비서는 대처 방안의 실현을 위해 도·시·군의 지도기관들에게 “**편파성**” 을 극복하고, 모든 농장들에게 “**정보당 수확고**” 를 높이는데 중심을 두라며 지도원칙도 함께 제시
 - 결과적으로 김 총비서는 **2022년의 식량 생산량 저하의 원인**이 **지도 간부들의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시사점〉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까지 북한 내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해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의 양곡 정책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북한 내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고 밝혀

㉔ **아젠다 발굴**

-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크게 악화된 이유는 김 총비서의 농업정책 ‘농촌혁명 강령실현’ 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
-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핵심 작물인 옥수수의 경작지를 줄이고 대신 밀·보리 농사 재배면적을 급격히 늘린 것이 농촌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작물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을 야기**
 - ‘농촌혁명강령실현’ 조치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했던 조치(포전담당제)를 **제한**하고, 대신 **2022년부터 국가의 식량 수매 비율을 상향**하여 식량 수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유통에 문제가 발생**
 - 그 결과 ‘**코로나19**’ 로 **시장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잉여 식량 생산물의 개인 간 거래마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식량 접근권이 제약**
- 결과적으로 이번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북한의 식량 문제의 현안은 식량 생산량의 증대이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식량 관련 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의 추정치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 녹록지 않음을 추정
-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해 2021-22년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량과 비료 수입량**이 2018-19년 대비 **최대 9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 밀·보리농사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식량 문제는 역설적으로 핵 문제로 인해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 이런 점을 감안, 북한 주민의 인도적 사안인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 파악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㉔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2년 미국농업리뷰 - 시장과 무역

※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2022 YEAR IN REVIEW - The Economics of Food, Farming, Natural Resources and Rural America” (2023.3.13.)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022년 미국농업리뷰 - 시장과 무역

- 종자와 농업 기술 혁신이 옥수수 농가의 생산성 및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새로운 종자 기술이 옥수수 재배 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줌. 또한 정밀농업 기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됨.
 - 새롭게 도입된 GE(genetically engineered) 옥수수 재배로 인한 종자 가격 상승과 제초제, 화학 비료의 가격 상승 등으로 옥수수 농가의 단위 면적당 생산비용이 증가함. 하지만,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옥수수 1단위 무계당 생산비는 감소하였음.
- 가금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년간 가금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2031년에 가금류 육류의 수입량은 1,750만 세제곱 톤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수입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2031년에도 가금류의 최대 수출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가금류 수출은 2021년 기준 세계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1년에는 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로 인하여 미국 농산물 수출이 감소함.
 - 2018년 미국이 주요 국가들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를 적용함. 이로 인하여 캐나다, 중국, EU(영국 포함), 인도, 멕시코, 터키는 농산물과 식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김.
 - 미국 상품 전체에서 보복 관세로 인하여 13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복 관세로 인한 피해는 대두, 콩류, 돼지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남.

㉔ **아젠다 발굴**

- 미국 농식품 무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력(resiliency)**을 보여줌.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액이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농산물 무역액은 증가하였음. 2020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497억 달러로 2019년에 비해 6.1% 성장하였고, 직전 5개년 최고액보다 높았음. 2021년에는 18.9%가 더 성장하여 1,770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무역액 성장에는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20년 마지막 3개월에 무역액 성장이 집중됨. 이는 2020년 초반의 코로나로 인한 무역액 감소를 상쇄함. 중국의 대두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 내 사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2020년에 유럽연합과 유럽국가 중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non-EU European countries)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의 농산물 수입액은 평균 3.3% 증가함.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 감소는 주로 알코올음료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에 미국이 유럽연합 알코올음료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효과로 보임.
- 전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은 60년 내 최저 증가율을 기록함.
 - 1961년부터 2020년의 연간 농산물 생산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은 농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지표로 2010년대에는 매년 1.12%씩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0년대의 1.99%보다 낮은 수치임.
 - TFP 증가율 감소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관찰됨. 개발도상국의 TFP는 2000년대에 매년 2.20% 증가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매년 1.06% 증가함.
 - TFP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농업 생산량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더 많은 토지와 투입재를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자료 출처:

<https://www.ers.usda.gov/>

㉔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폐지(중간보고)

※ 일본농업신문 “技能実習廃止へ新制度 中間報告 中長期的に人材確保”(2023.4.29.),
일본 총무성 “技能実習制度及び特定技能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7回)”
(2023.4.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폐지(중간 보고)**

- **일본 총무성**은 2023년 4월 28일, **외국인 기능실습·특정기능제도를 재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둔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함.
 -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추가한 **새로운 제도 신설을 제안**하는 중간보고를 공개하였으며, **최종 보고서**는 2023년 가을에 확정 **발표** 예정임.
-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는 **인력 부족 심화**를 배경으로 **일본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으로 돌아가 중장기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태는 일본 국내 노동력 확보책**으로 이용되거나 **임금 체납 등 노동력 문제 및 폭력·갑질** 등이 끊기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음.
- **새로운 제도**는 **일본 인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일본 경제 사회의 중요인력**이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따라, **외국인과 공생사회 실현**이 바람직한 모습임을 염두에 두고,
 - **인권을 배려**하면서 **일본 산업 및 경제, 지역사회를 함께 유지**하는 **일원**으로써 **외국인을 적절히 수용**하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 갖춘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본의 심각한 인력 부족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한 후 **국제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목표로** 함.

┃ 검토 기본방향 ┃

논점	현행	새로운 제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육성을 통한 국제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능실습제도는 폐지하고 인재 확보와 인재 육성(미숙련 노동자를 일정한 전문성 및 기능을 갖춘 수준까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설(실태에 입각한 제도로 근본적인 재검토) 검토

㉔ **아젠다 발굴**

논점	현행	새로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기능제도는 제도의 적정화를 도모·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제도와 관계성, 지도 감독체제 및 지원 체제 준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장기적 활약 가능한 제도 구축 (커리어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종이 특정 기능 분야와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도와 특정기능제도 대상 직종 및 분야 일치(주요 기능 육성·평가 실시, 기능평가 기본방향 등 논의) 현행 두 제도 모두 직종 및 분야 등 특정 기능 2호 대상 분야 추가 및 설정 기본방향에 대해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
수용 예상 수 설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예상 수 설정 프로세스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소관성청(業所管省庁)의 대응 상황 확인 및 수용 전망 수 등 설정, 대상 분야 설정은 다양한 관계자 의견 및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 프로세스 투명화 도모
이직 (기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 육성에서 유래한 이직(전직) 제한은 유지하면서, 제도 목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제도 취지와 외국인 보호 관점에서 기존보다 완화(이직 제한 기본방향 추가 논의 필요)
감독관리 및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단체, 등록지원기관, 기능 실습기구의 지도감독 및 지원 체제 불충분 악질적 기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단체 및 등록지원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중요, 한편 인권침해 등을 방지·시정할 수 없는 감리단체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등록지원기관은 엄격하게 관리·배제할 필요 관리단체 및 등록지원기관 요건 엄격화 등을 통해 관리·지원 능력 향상 도모(기능이나 요건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등 논의 중) 외국인기능실습기구 체제를 정비한 후 관리·지원 능력 향상 도모 악질적인 송출기관 배제 등을 위한 실효적인 양국 간 합의 등 대응 강화
일본어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 및 교육 수준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시작 전 일본어 수준 확인 및 단계적 향상 구조 마련

■ 자료 출처: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152910>

https://www.moj.go.jp/isa/policies/policies/03_00066.html

㉔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바이오경제 관련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바이오경제 관련 주요 동향**

- **‘바이오’** 라는 단어는 대개 **의약품·백신**을 떠올리지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공학 기술**이 쓰이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은 크게 **레드·그린·화이트** 세 가지로 분류
 - **(레드 바이오) 의료 제약 분야**가 ‘레드바이오’로, 혈액의 붉은색에서 따와 레드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백신·치료제, 의료기기** 등이 해당
 - **(그린바이오)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식품**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뜻하며, **대체식품** 등 **식물 단백질 육류 묘사 기술**, **동물세포 배양 기술**과 **종자 분야**에서 **분자, 디지털 육종, 유전자 가위 기술**이 대표적, **동물용 의약품 분야**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줄기세포 기술, 생명 소재 분야**의 **곤충·해양생물·식물 정유** 등도 포함
 - **(화이트바이오)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합성생물학·대사공학**도 화이트바이오의 주류
- **바이오경제(Bioeconomy)**란 **바이오 자원**과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메커니즘**, 특히 그간 **헬스케어 분야**에만 집중되던 바이오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바이오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 **미(美) 백악관**은 2022년 9월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바이오 기반 친환경 소재·연료, 공급망, 식량, 보건** 등 **바이오경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도 2023년 3월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한 **‘바이오 대전환(BX)’** 추진을 제안

㉔ **아젠다 발굴**

- **바이오 혁명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 또한,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떠오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한국에서도 **‘그린·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
- 한편, 글로벌 화학사들은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을 합병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202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7%씩 빠르게 성장해 2027년에는 1조 9,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 하지만 **한국의 그린바이오 기술 수준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2~5년이나 뒤처져** 있는 상황
-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2020년 기준 5조 4,000억 원** 규모의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을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키우고 **유니콘 그룹 15개 사**를 **육성**한다는 목표(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Vo. 7, 2023.2.20. 참고)
 -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이상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범부처 정책금융**(2조 2,000억 원), **혁신성장펀드**(3조 원) 등 다양한 **자금 활용**을 지원
 - 주요 성과로 **CJ제일제당**이 대표적, **식품·사료첨가제 품목 7종**(트립토판·발린·알지닌·이소류신·히스티딘·핵산·농축대두단백)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2017년에는 **브라질 글로벌 농축대두단백 1위** 업체 ‘셀렉타’를 인수했고, **2022년 그린 바이오 사업**으로만 **5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
 - LG화학이 인수한 **팜한농**은 **애초 농약·비료 생산 기업**이었는데 **식물 종자 분야**에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팜한농은 글로벌 톱10 그린바이오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해외 확장**을 추진 중, **작물보호제 사업**은 비선택성 제초제 ‘테라도’ 등 자체 개발 신규 원제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예정
 - 벤처·스타트업 **바이오엠펜**은 **세계 최초로 식물세포를 활용**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캐나다에 수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은 **담뱃잎**에 **돼지열병 항원단백질**을 도입해 **백신**을 제조했는데, **병원성 복귀의 위험**이 없고 **수입 백신 대비 약 8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아**

㉔ **아젠다 발굴**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4월 26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이오 업계,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경제 미래전략포럼’** 을 개최(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 Vol. 17, 2023.5.2. 참고)
 - 이번 행사는 주요국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종합정책**에 대응해 국내 업계와 학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바이오경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경제**는 세계적으로 **연간 10% 이상 빠른 성장**이 전망 되는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이자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산업 전반의 대전환**과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데이터, 소재, 에너지, 식품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바이오경제 종합전략인 **‘바이오경제 2.0 전략’** 을 **2023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이오 경제 2.0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바이오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학계,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

자료: “바이오경제 미래전략 수립…민관 합동 신산업 육성” (NEWSIS, 2023.4.26.), “농업혁신 ‘팜테크’ · 탄소감축 ‘바이오연료’ …식량 · 기후 난제 푼다 [미리 보는 서울포럼 2023](서울경제, 2023.5.1.)

※ **국회 정책세미나 일정입니다.** ㉕

일정	세미나	장소
2023년 05월 08일(월) 14:00	•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23년 05월 15일(월) 19:00	• 시장의 실패, 정부실패 그리고 정부규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출처: 국회 홈페이지

통계·조사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자료 : 통계청(202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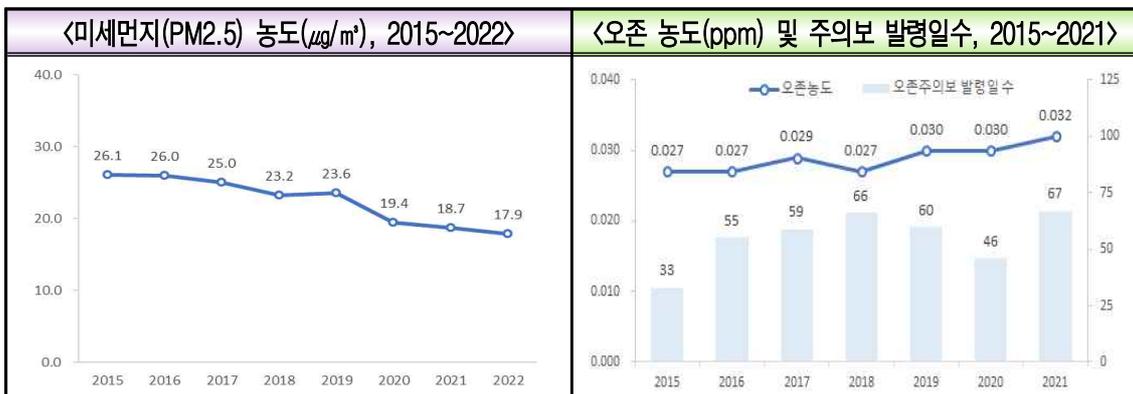
☐ 개요

-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2023.4.28.] 2023년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
 - ※ 안전 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

☐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1. 위해·환경 요인>

- [범죄] 20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2011~2021) 중 가장 낮은 수준
-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 2021년 218천 건으로 2020년 대비 16천 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
 - 20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 $\mu\text{g}/\text{m}^3$ 로 2020년 하락 폭이 두드러진 반면, 20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
 - ※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21년 67일로 2020년(46일)보다 21일 증가



출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1) 미세먼지 농도는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기준한 평균값, 2)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인 경우 발령

㉔ 통계·조사

-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째 (2020년)의 증가 폭이 두드러져

- 2021년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은 1.18kg, 전년(1.16kg) 대비 0.02kg 증가

▣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톤/일) 및 1인1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kg/일), 2011~2021 ▣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생활계 폐기물 = 생활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2. 취약 요인>

- [아동학대]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2013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이후 2021년 크게 증가
- [사회적 유대]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증가, 남자 (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
- [실업] 2022년 실업률은 2021년(3.7%)보다 0.8%p 감소하여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
- [주거 여건]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 대비 0.1%p 감소,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6%로 4%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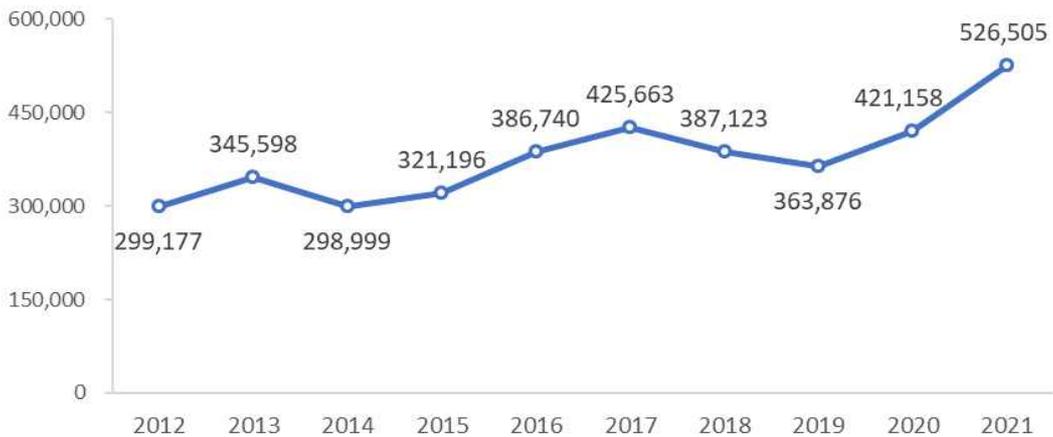
<3. 대응 역량>

- [공공안전인력]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 감소 추세

㉔ 통계·조사

- (경찰 1인당 주민 수) 2020년 411명에서 2021년 400명으로 감소
-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2020년 859명에서 2021년 807명으로 감소
- [병상] 20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
 -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 2021년 661천 개로 2020년(656천 개) 대비 5천 개 증가
- [산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022년 2,017만 명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서며, 산재보험 가입 직종의 단계적 확대로 보호 대상 근로자 증가 추세
- [풍수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52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 특히, 2020년 자연재난 피해가 매우 커*, 예년에 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 증가
 - ※ 20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20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볼라벤’의 영향으로, 호우(1조 952억 원), 태풍(2,225억 원) 등의 총 1조 3,18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됨.

■ 풍수해 보험 가입건 수(건), 2012~2021 ■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4. 피해(영향)>

- [자연 재난] 2021년 자연 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2021년 사망(실종자) 42명으로 전년(75명) 대비 33명 감소, 원인별로는 호우 및 태풍은 감소한 반면, 폭염은 증가
 - (2021년 피해액) 661억 원으로 전년(1조 3,182억 원) 대비 크게 감소

㉔ 통계·조사

- [사회재난] 2021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23건)는 전년 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 크게 증가
 - (20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 5,087명,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하여 인명피해 대폭 증가
 - (2021년 피해액) 6,767억 원으로, 전년(3,343억 원)보다 2배 증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5,178억 원), 가축 질병(1,291억 원), 산불(177억 원) 순으로 발생
- [산재] 산재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 산재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지속 증가
 - (2022년 산재사망률) 근로자 1만 명당 1.10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
 - (2022년 산재사망자 수) 2,223명으로 20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
- [운수사고] 운수사고 사망률은 201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2021년 운수사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
 - (20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 3,624명*으로 전년 대비 323명 감소
 - ※ (운송 수단별)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으로 발생
- [건강] 2021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식중독·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
 -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 2021년 669천 건으로 전년(167천 건) 대비 약 4배 증가, 2021년 코로나19 환자(570천 명)가 전년(61천 명) 대비 9배 이상 증가
 - (식중독 환자) 2021년 5,160명으로 전년(2,534명) 대비 2배 발생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2021년 1,37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
- [자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21년 26.0명으로, 2017년 이후 증가
 - (성별)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20년보다 증가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 자살률 증가

㉔ 통계·조사

□ OECD 회원국 간 국제 비교

- [미세먼지 농도] 2020년 미세먼지(PM2.5)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OECD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 2020(단위: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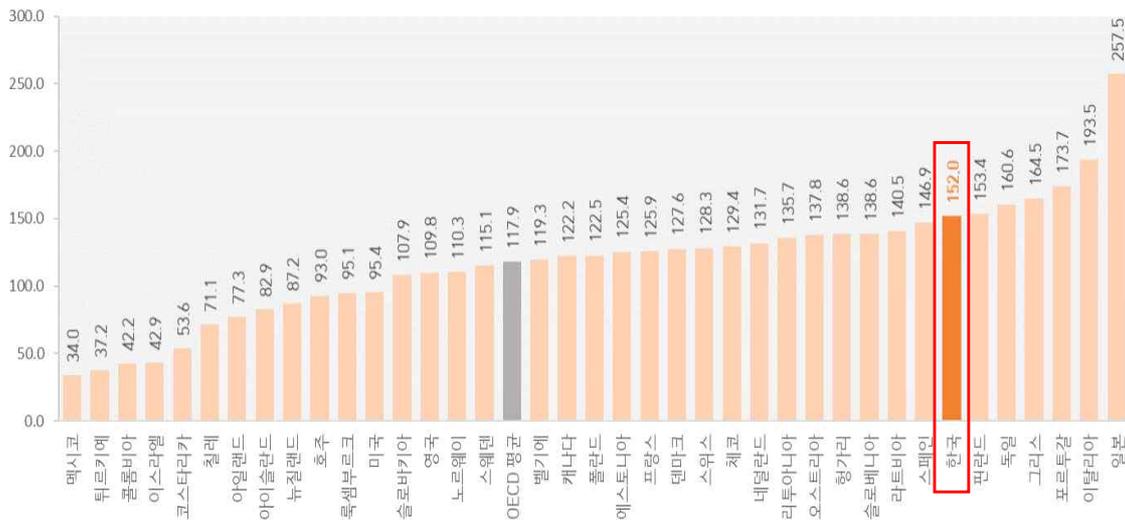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 [노령화지수] 2022년 노령화지수는 152.0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 OECD 국가별 노령화지수, 2020 ▮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칠레,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잠정치임.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